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 현황 및 계획

★ 현재 대학교육의 주요 정책은 지역발전의 중심이 되는 경쟁력 있는 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를 중심으로 개편,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재정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당 사업은 현 시기 대학이 추구해야 할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정부 정책의 지향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추진 현황과 계획을 살펴봄으로써, 지역과 연계된 대학 발전 추구의 향방이 우리 대학에 어떠한 고민과 과제를 시사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역-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구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가 시행됨에 따라 지역(지자체) 주도의 지역발전전략과 대학 지원의 연계 모델 발굴 기대
 - ‘23~24년에는 시범지역 운영 및 추진 기반 마련의 사업 추진
 - ※ (‘23)RISE사업 3,540억원 → (‘24) 1조 2,025억원(RIS, LINC, LIFE, HIVE, 지방대활성화 등 5개 정책사업을 통합하여 RISE체계로 이관)



1 RISE 추진 기반 구축 및 시범 사업 추진

- 시범지역 모델을 기초로 전 시도의 RISE 기본계획 수립(~'23.12), 지자체 전담부서 정비RISE 센터 지정(~'24.9). (가칭)지역고등교육위원회 설치 등을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 추진

〈 시도별 RISE 체계 구축 현황(2023.9.기준) 〉

시·도	전담 부서	구성	지역 라이선센터(지정일)
경남	교육인재담당관	1과 6팀(21명)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7.14.)
경북	교육협력과	1과 2팀(6명)	경북연구원(7.14.)
대구	대학협력 TF	1팀(9명)	대구정책연구원(7.25.)
부산	지산학협력과	1과 5팀(25명)	부산테크노파크(5.18.)
전남	대학혁신추진단	1단 2팀(6명)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7.25.)
전북	대학협력팀	1팀(7명)	전북테크노파크(5.18.)
충북	RISE 추진과	1과 3팀(14명)	충북연구원(7.14.)

■ 7개 시범지역 RISE 시범 사업 추진 계획(안)

시·도	프로젝트(안)	주요내용
부산	지역발전연계 인재육성 생태계 구축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창직도전형 스타트업 인재양성, 평생직업교육훈련 활성화 지원, 지역대학의 지역사회 기여
대구	지역산업 대전환, 열린대학	특성화 기반 파워풀 인재양성, 지산학협력 산업혁신 플랫폼 구축, 혁신도시 BIT 캠퍼스, 동성로 캠퍼스타운 등 지역과제 공동해결
충북	충북형 CO-Design 4+1 프로젝트	주력산업 특화대학, R&D 기반 혁신 선도대학, 평생직업교육 앵커대학, K-컬처 혁신대학, 지속가능 혁신 플랫폼 구축
전남	지역산업혁신 챌린지	주력산업(조선, 화학, 스마트팜)+미래산업(에너지, 우주항공) 연계 발전 플랫폼 구축 및 글로벌 인재 허브센터(외국인 유학생 지원) 설치·운영, 지역현안 해결 리빙랩 지원
전북	청년활력타운	수요맞춤 주거공간(주거·문화·복지 결합)을 다부처(국토부, 행안부, 문체부) 협업으로 제공, 전북시민대학 운영 등
경남	글로벌 연구 특성화 대학	항공우주, 스마트기계, 방위산업 연구중심 대학 육성, 기업연구소 유치, 지역과 대학의 유휴 기반시설(인프라) 활용(연구 특화 워케이션 클러스터 조성)
경북	1시군-1대학-1특성화	지역동맹+대학동맹으로 교육·취업·주거·결혼 정책 통합 지원 ※ 지방정부 가용재원의 10%투자(10년간)+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2 RISE 체계 내 지역혁신 선도대학으로 글로벌대학 육성

■ 대학 내·외부 벽을 허무는 과감한 혁신*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취업·정주의 지역발전 선순환 모델을 실현하고 지역 곳곳에 누구나 진학하고 싶어 하는 우수 대학으로 글로벌대학 육성

※ ('23)총 10개 글로벌대학 지정(10월 말 예정), ('24)10개 내외 추가 지정(총 20개 내외)

■ '25년 RISE 체계 전환과 함께 글로벌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체계도 중앙에서 시·도로 전환

※ ('23~'24) 국립대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공·사립대는 지방(전문)대 활성화 사업으로 지원

글로벌 신청대학의 '벽 허물기' 혁신 전략 제안 사례

① 미래형 학사구조로 전환

구분	학생 전체 무전공 모집	일부 무전공 모집 및 학사구조 개편	모집단위 광역화
학생모집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단과대 통합 모집 (단과대 내 선택권 부여) ▶ 전체 무전공 통합 모집 (통합대학으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과/학과 통폐합(모집단위 축소) ▶ 첨단융합대학/자율전공학부 설립 ▶ 정원 일부 무전공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과대학 통폐합 ▶ 학과(전공)제 폐지 등
학사 및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과/전공 선택 유연화, 복수/다전공 활성화, 마이크로 디그리 ▶ 학점/학기제 다변화 ▶ 모듈형 교육과정,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공동 교육과정 확대 ▶ 융합 및 현장 교육과정, 프로젝트 기반 교육과정 		

② 대학 간 통합 추진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국립+국립	국립+공립	일반대+일반대	일반대+전문대	일반대+전문대+사이버대
제안대학	4개	1개	1개	5개	2개

3 지자체 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 지자체의 대학 지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지원

- 시·도 조직 정비, 정책 취지에 맞는 RISE 계획 수립 지원 등을 위해 **시·도별 전문가 컨설팅* 상시 지원** (~'24년말)

* ('23.3월~) 대학·산업·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RISE 컨설팅단 운영(22명)

- 지역혁신, 산학협력,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이해, 대학재정지원 사업 기획 및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 개설·운영**

※ ('23.8월말) 중앙교육연수원 '지자체 RISE 이해연수 과정' 운영 → (매년) 2회 이상 연수과정 운영

- 시·도별 RISE센터 지정 지원 및 지정된 센터와 협력 네트워크 구성. 센터 운영 전반 지원

■ 지자체 수요를 바탕으로 RISE계획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 발굴·협력을 위해 교육부가 지방시대 위원회와 협력하여 RISE협의체 운영

■ 중앙부처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지역주도 사업 중 RISE 프로젝트 연계 가능 사업 및 모델을 지자체에 제공

4 관련 정책 추진의 시사점

■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지자체와의 연계 필요성 증대

- 지역혁신, 산학협력 및 직업교육, 대학평생교육 등과 관련된 정책사업 및 재정 지원이 지자체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사업 추진 시 지역(지자체)의 요구 반영 및 협의가 더욱 필요

■ 방송대 교육에 대한 대내·외 변화 요구와 관련하여 대학 교육 혁신에 대한 방향성 고민 필요

- 글로벌대학 등을 통해 일반대학의 과감한 대학 혁신 사례 등장 예상. 방송대는 현 상황에서 어떤 방향성과 목표를 갖고 교육혁신을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대학 당국의 고민 필요

■ 방송대의 향후 중심 발전 및 혁신과제 탐색을 통해 정책·재정 지원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필요

- 대학 재정 지원에서 교육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상황을 고려, 향후 방송대가 추구해야 할 주요 발전과제를 중심으로 교육부 또는 지자체 등과 전략적 관계 구축 필요

*〈자료출처〉 교육부(2022. 9.).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사회관계장관회의 보고자료. / 교육부(2023.8.29.) 교육부 예산안 95.6조 편성. 교육부 보도자료. / 교육부(2022.7.12.)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로 벽을 허무는 대학개혁 가속 추진. 교육부 보도자료.



고등·평생교육 관련 주요 법령 개정 사항

★ 교육부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23.9.12.)함으로써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학이 융통성 있게 대응하고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시행된 일련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을 통해 국가 및 지역의 정책 및 예산 지원을 통해 성인 진로교육과 노인교육 등이 실행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상기 법령의 개정안에 담긴 주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대학이 고려해야 할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주요 변화 상황을 조망해보고자 합니다.

1 대학 혁신 지원을 위해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

■ 대학의 설립 시 필요한 요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4대 요건’에서 교지 기준을 폐지하고 ‘3대 요건’만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3대 요건 또한 대폭 완화하여 대학이 역동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건축관계법령 요건만 갖추도록 하고 별도의 교지 면적 기준 폐지
- 교사확보율 100% 이상 충족 시, 교지·교사 임차 활용, 재학생수가 학생정원보다 적은 경우, 교사·교원 확보 기준 산정 시 재학생수 적용
-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1/5에서 1/3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산업계 등의 우수 전문인력 활용

		현장 사례	개선 후 변화
3대 요건	교사 교지 	▶ A대학은 입학정원의 감소 등으로 현행 기준만큼 넓은 규모의 교사·교지는 불필요	▶ 교지면적기준이 폐지되고, 교사 기준이 완화되어 늘어난 유휴 재산을 활용해 - 수익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어 교육·재정여건 개선
	교원 	▶ B대학은 기업 수요와 현장 적합도 높은 교육을 위해 현장 전문가 채용 확대를 희망	▶ 현장전문가를 겸임·초빙교원 등으로 확대 채용하여 다양한 강좌 개설 수요 충족 가능
	수익용 기본재산 	▶ C학교법인은 C대학에 매년 4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하고 있으나, - 수익용 기본재산이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에 미치지 못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낮게 평가	▶ 법인은 대학의 '연간 등록금·수강료 수입' 해당 가액만큼 확보하되, - '연간 등록금·수강료 수입액'의 2.8% 이상 대학에 투자하면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
	임차 	▶ D대학은 최근 교원을 채용하여 교수 연구실을 추가 확보해야 하나, 교사·교지는 설립주체 소유가 원칙이므로 임차 불가	▶ 대학이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교육·연구 여건을 보다 쉽게 개선 가능

- 학교법인 분리, 통·폐합, 위치 변경, 학생 정원 조정 및 대학원 신설 요건 등 대학 운영 기준 완화
 - 대학 간 통·폐합 시 일률적으로 입학정원을 감축하도록 한 종전 조건 삭제, 통·폐합 대상을 전공대학과 비수도권 사이버대학까지 확대하여 대학의 구조개혁 가속화
 - 종전에는 대학이 기존 캠퍼스와 새로 조성되는 캠퍼스 모두 교지와 교사 확보율을 100% 이상 갖춰야만 이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새로 조성되는 캠퍼스의 시설 여건만 갖추면 이전
 - 학부와 대학원 간 학생정원 조정 시 학부생 총원율과 학부 정원 감축 요건을 폐지, 박사과정 신설 시 교원 연구실적에 대한 획일적 기준을 없애고 대학이 학칙으로 자율 규정
 - 전문대학원을 신설할 경우 교원 확보 기준을 일반대학원 수준으로 완화(학부 정원의 2배→1.5배로 산출)하고, 다른 학부(대학원) 소속 교원과 시설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현장 사례	개선 후 변화
그 외의 개선	학교법인 분리 ▶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E학교법인이 일부 학교를 분리된 법인에 두려는 경우, - 대학 설립 시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을 적용하므로, 법인 분리 곤란	▶ E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법인 분리를 할 수 있어, - 학교 간 통·폐합 등 구조조정, 경영 합리화, 대학 선진화 촉진
	대학 통·폐합 ▶ F법인은 소속 대학을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싶으나, 입학정원 감축 의무가 있어 통·폐합 결정 곤란	▶ 정원 감축 부담이 완화되어 법인의 운영 여건 등에 따라 자발적인 통·폐합 가능
	위치변경 ▶ G대학은 일부 학과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나, 기존 캠퍼스의 교지 확보율이 100%를 충족하지 못해 이전 불가	▶ 기존 캠퍼스의 교지 확보율과 무관하게 신규 캠퍼스의 교사시설·여건을 갖추면 이전 가능
	학부 정원 ▶ 여러 캠퍼스를 가진 H대학이 캠퍼스별 특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원이 늘어나는 캠퍼스의 교지·교사 확보율을 100% 충족 필요	▶ 정원이 늘어나는 캠퍼스만 교사 확보율을 100% 충족하거나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정원 이동 가능
	대학원 ▶ I대학원은 학부 재학생 총원을 기준 또는 정원 감축 기준을 갖추지 못해, -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이 불가 ▶ J대학은 전문대학원 설치를 위해 소속 교원과 전용 교사시설을 확보해야 하며, - 교원 확보율을 학부 정원의 2배로 산정 필요 ▶ K대학원은 확보해야 하는 교원의 1/2이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연구실적을 갖추지 못하여 박사과정 설치 불가	▶ 학부 재학생 총원을 기준과 정원 감축 기준을 미충족하더라도 -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가능 ▶ 전문대학원 설치 시, 다른 학부(대학원) 소속 교원과 교사시설을 공동 활용 가능 - 교원 확보율을 학부 정원의 1.5배로 산정 ▶ 확보해야 할 교원 중 학칙으로 정한 인원이 학칙에 따른 연구실적을 갖추는 경우, 박사과정 설치 가능

2 대학에서의 성인 진로교육 시행 근거 마련 등의 평생교육법 개정

- 평생교육 영역에 성인 진로교육을 추가하고, 평생교육기관, 대학, 국가진로교육센터 및 지역 진로교육센터에서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2조 1항, 6항, 제40조의 3] (2023.6.13. 개정/ 2024.4.19. 시행)

- 성인 진로교육(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은 성인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탐색·준비·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 정보 제공, 진로 체험 및 취업 지원 등 제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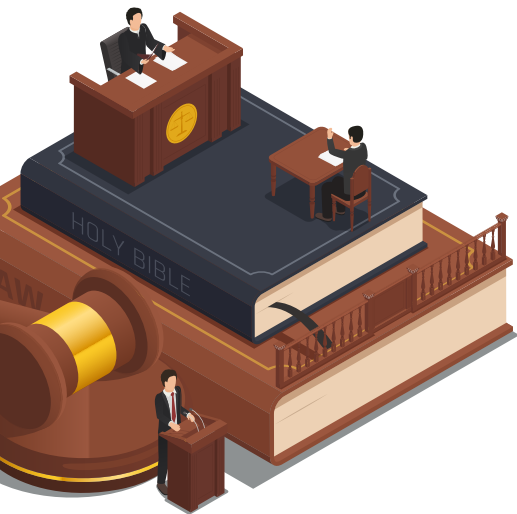
* 「평생교육법」 상에서 제시한 평생교육 6대 영역 :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 노인 대상의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평생교육과정 운영, 지자체의 예산 지원의 근거 마련 [제20조의 3](2023.4.18. 개정/ 2024.4.19. 시행)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노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 가능
- 평생교육기관은 노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노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 가능,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3 법령 개정에 따른 시사점

- 교지, 교사 등에서 자율 범위를 확대하고, 일반대학-사이버대학 간 통합도 가능케 함으로써, **출석 기반의 대학 운영 책임을 대폭 완화하고, 온라인 기반의 다양한 교육 방식 결합 기반을 한층 강화**. 원격대학이 보유해 왔던 독자적 특수성은 상대적으로 약화
- **현장 기반의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교원 활용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현장 전문성 반영의 교육과정 운영 필요의 요구가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
- **대학원과 관련된 일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대학들이 확대된 대학원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이에 따라 대학에서의 성인학습자 대상의 전문계속 교육과정 확대에 대한 관심도 증가될 수 있을 것
- **대학이 성인 진로교육 시행의 주체로 규정됨에 따라 대학에서 성인학습자의 제2, 제3의 인생 설계 및 준비, 취업, 창업, 전직 등을 지원하는 진로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 및 정책적 요구 발생 고려**



*〈자료출처〉 교육부(2023.9.12.). 대학의 자율적 혁신·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보도자료. / 평생교육법 개정안. 법령

스페인국립원격대학 **Universidad Nacional de Educación a Distancia**

★ 2023년 원격고등평생교육 제3호와 4호에서는 '22년 <방송대 국립대육성사업> 수행 결과로 발간된 <세계 개방대학 총서> 5, 6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해외 원격 개방대학의 운영 사례는 향후 방송대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하는데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호에서는 우리 대학과 마찬가지로 2022년에 개교 50주년을 맞은 스페인 국립원격대학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개요

■ 스페인의 국립원격대학인 UNED(Universidad Nacional de Educación a Distancia)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마찬가지로 1972년에 설립하여 2022년에 개교 50주년을 맞이함

- 대학이 없는 지역과 여러 사정으로 대학에 다닐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대학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72년 스페인 교육부가 무료원격대학(UNILAD) 사업을 기반으로 UNED를 공식적으로 설립

■ 재학생 규모는 2021~22학년도 기준으로 정규 학위과정에 158,326명(비정규 학위과정까지 합하면 약 18만 명)

- 정규 학위과정의 재학생 분포는 성별로는 여성 55% 남성 45%, 학위과정별로는 학부과정 92% 석사과정 7%, 박사과정 1%, 계열별로는 학부과정의 경우 사회과학 및 법학 45% 보건 22% 예술 및 인문학 21%, 과학 7%, 공학 및 건축 5%, 국적별로는 외국 국적 학생이 4%(6,471명)

- 최근 학부과정 학생 수는 감소 추세인 반면,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 수는 증가 추세

* 팬데믹 기간인 2020~21학년도만 학부과정생 수가 증가한 후 21~22학년도 다시 감소

■ 교직원 규모는 2021~22학년도 기준 교육 및 연구 활동을 담당하는 교수진(교수 및 연구원)이 1,198명, 행정과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이 1,088명

■ 학습센터를 스페인 내에 61개, 유럽, 아프리카, 남북미 등의 해외에 22개 운영. 학생들이 튜터와 상담을 하거나, 시험에 응시 또는 컴퓨터 및 도서관 이용



2 교육과정

공식 학위과정 외에 언어교육과정, 열린UNED, 평생교육과정, 대학입학자격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p>■ 학위과정</p>	<p>- 학부과정 30개, 석사학위과정 75개, 박사학위과정 21개 등 공식 학위과정 - 관련 분야 두 개 전공(예, 경영학+관광학, 산업기술공학+기계공학 등 5개 학부) 교과목을 조합하여 두 개의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복수학위 과정 - 짧은 기간에 전문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과별 최소 학점을 이수하고 작은 단위의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16개 마이크로 학위 과정 운영</p>
<p>■ 언어교육 과정</p>	<p>- 독일어, 영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등 16개 언어교육과정 운영 - 국적과 상관없이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대학원격언어교육센터(CUID)에 등록 가능하며 무료 레벨테스트 제공, 이수 후 각 언어 레벨에 대한 인증서 제공</p>
<p>■ 열린 UNED</p>	<p>- 대학 강의를 무료로 오픈한 오픈코스웨어(OCW), 대규모 온라인 공개강좌인 MOOCs 등 온라인 기반의 무료 공개강좌 제공 - 유튜브 채널, 디지털 콘텐츠 저장소, 각종 멀티미디어 및 출판물, 소셜 네트워크 등을 통해 디지털 자료 공개</p>
<p>■ 대학평생 교육</p>	<p>- 정규 학위 프로그램 이외의 세미나, 컨퍼런스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포함하는 대학 확장 과정,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수강 가능한 여름 코스, 55세 이상을 위한 UNED 시니어 과정 등 운영 - 500개 이상의 학사 후 전문 프로그램, 전문성 및 개인 개발 프로그램, 고등기술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직업훈련 과정 등 운영 - 각 과정에 따라 인증서 또는 디플로마를 발급받거나 자격증 획득,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p>
<p>■ 대학입학 자격과정</p>	<p>- 대학수학능력시험 자격 등 대학 학부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만25세, 만45세 이상을 대상으로 대학 학부 과정 입학 자격을 주는 교육과정(Acceso Curso+25, 45)과 시험제도(Acceso Test+25, 45) 운영 - 최소 10년 이상 전문직 경험은 있으나 대학 입학 자격을 얻지 못한 만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전문 경력 인증을 통해 학부 과정 입학 자격을 주는 Acceso+40 운영</p>

3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대응

코로나 팬데믹 동안 교육과 평가에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UNED 100% 프로젝트’ 실시

- 팬데믹으로 인해 질 높은 교육과 평가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는 UNED의 선언. UNED의 2020~21학년도 모든 정책에 적용
- 교수학습을 블렌디드 방식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 웹 컨퍼런스 강의실을 원활히 사용하도록 교수자와 학생에게 튜토리얼, 웹세미나, 지침과 권장사항을 포함한 웹 문서 제작 지원
- 장애 학생, 재소자 학생 등 온라인 교육과 평가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UNED 100% 학생조사’ 실시. 학생들의 학습 참여 활동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개별화 지원 제공

평가방식 비대면으로 전환. 가상시험교실(AvEx, Virtual Exam Classroom) 애플리케이션 개발하여 사용

-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사고 접수 비율은 시험 건수 대비 약 0.5%

* <자료 출처> 김상홍·양유정·이은경·정연희·정혜령·주형선(2022). 스페인 국립원격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래원격교육연구원.